

이재명 대표 “지역화폐 발행에 50조 정부 지원 필요”

서울 주민센터서 간담회…지역화폐 현장 점검 ‘민생 행보’ 재개

민주 ‘기소 시 당직 정치’ 예외 인정…‘인적 쇄신’ 조만간 결론 가능성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민생 행보에 나섰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 ‘기소 시 당직을 정치한다’는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이튿날인 2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50조원 가량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북구의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어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경제·골목경제·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으로는 이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자사 시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렸던 지역화폐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무능 프레임’을 부각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전날 오전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몇 시간 만에 열린 당무회가 ‘기소 시 당직 정치’ 당헌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었다고 보고 민생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보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운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기소 당일 당무회가 열린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물음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절충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헌의 내용을 적용하는 데도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치한다’고 돼 있고,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치되지 않았는데도 관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표로서는 이 같은 비명계의 반발이 고민스러운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의 영향으로 여론의 지지가 하락하는 호재를 맞은 상황에서 내부 분열은 또다시 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단행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서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의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과 달리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면서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인태 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통해) 공공 환수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남 무당층 39% ... 고심 깊은 민주

‘갤럽 조사’ 당 지지율 38% 보다 높아...국힘 12%·정의 7%

더불어민주당이 첫번째 호남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유권자층으로, 부동층 또는 숨은 표심으로 부르기도 하는 무당층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은 향후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2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3월 3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전라 지역의 무당층 지지율이 39%로, 민주당

지지율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12%, 정의당은 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의 정치조사에서도 3월 들어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큰 폭으로 급락했다.

3월 1주차 광주전라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51%를 기록했으나, 2주차에는 48%로 떨어졌고 이번 3주차 조사에 30%대로 주저앉았다. 무당층 지지율은 3월 1주차에 27%였다가 2주차에는 24%, 3주차에 39%까지 치솟았다.

민주당은 1년 전만 해도 70%를 넘나들던 정당

지지율이 40% 선까지 무너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총선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있어 민주당 고민도 깊어졌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한국갤럽의 정례조사 경우 표본이 너무 적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대선 패배에 따른 호남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는 만큼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면서 무당층이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갤럽 3월 3주차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초과 생산된 쌀 정부 의무 매입...尹,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지역의 현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 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의원 300석 유지·비례대표 개선

정개특위, 선거제 3개 안 의결...30일 전원위 구성

여야는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

했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이들 3개 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전원위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2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치고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원위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사흘 미뤄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